

---

# Issue Briefi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40915 vol.135

---

## 귀농 · 귀촌 3만가구 시대! 전라북도 귀농 · 귀촌 현황과 향후 과제

---

연구진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 C O N T E N T S

### 귀농 · 귀촌 3만가구 시대! 전라북도 귀농 · 귀촌 현황과 향후과제



- 1. 귀농 · 귀촌의 필요성
  - 1) 농촌인구 유지
  - 2) 새로운 농촌일자리 창출
  - 3) 영농후계인력 확보
  - 4)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 2. 전라북도 귀농 · 귀촌 현황 및 특성
  - 1) 전라북도 귀농 · 귀촌 현황
  - 2) 최근 귀농 · 귀촌 특성
  
- 3. 귀농 · 귀촌의 장애요인
  - 1) 소득화 미비
  - 2) 주거문제
  - 3) 유치경쟁 심화
  - 4) 여성일자리 부족
  - 5) 도농갈등
  - 6) 종합지원체계 미비
  
- 4. 전라북도 귀농 · 귀촌 발전비전 및 추진방향
  - 1) 전라북도 귀농 · 귀촌 비전 및 전략
  - 2) 추진방향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09월 15일 vol.135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3만가구 시대!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과 향후 과제

전라북도의 농촌인구는 2010년 50만명에서 2020년 42만명, 2030년 3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농촌인구는 2010년 현재 31.2%에서 2030년에는 43.4%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공공서비스와 상업적 생활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이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과소화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귀농·귀촌정책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 가치 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귀농·귀촌 붐을 타고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32,424가구, 전라북도에는 이 중 9.2%인 2,993가구가 귀농·귀촌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귀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영농소득 기반의 미비 ▲주거문제 ▲지자체간 유치 경쟁 심화 ▲여성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책의 부재 ▲농지확보나 가치관 차이 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귀농·귀촌 정책의 종합적·전문적 관리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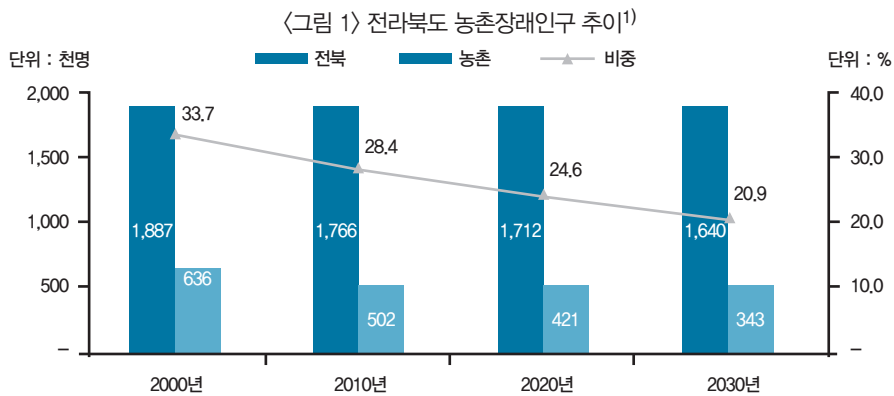
현재 귀농인의 51% 정도가 2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귀농함에 따라 주택확보 후 잔여자금 부족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가 어렵다. 예비 귀농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확보이다. 지역내에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실제 거주가 가능한 농촌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귀농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착단계별 거주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경북(상주, 청도), 충북(진천), 경남(거창)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도시민 유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도시민의 대부분은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귀농 초기 2~3년 내에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도 핵심적인 과제이다.

‘귀농일번지 전라북도’를 귀농·귀촌 선도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 용자 지원 및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장기 실습교육 강화로 안정적인 영농소득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도시민 정착단계별 주거지원과 예비귀농자의 임시거주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귀농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귀농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베이비부버 세대 유치를 위한 선제적 홍보기능 강화와 귀농인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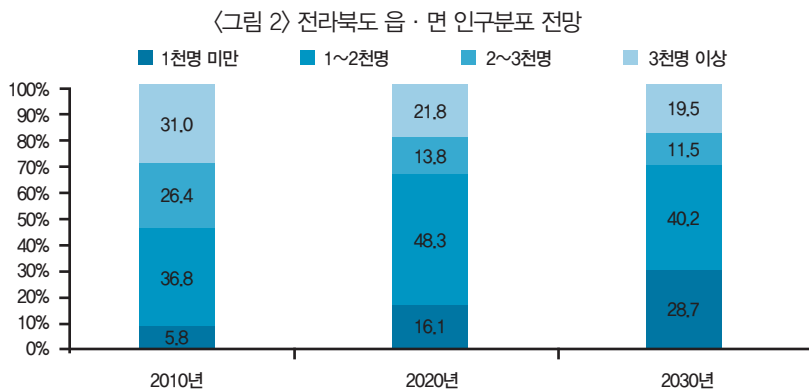
# 1. 귀농 · 귀촌의 필요성

## 1) 농촌지역 인구유지

- 전라북도 농촌인구는 2000년 64만명, 2010년 50만명에서 2020년 42만명, 2030년 3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는 33.7%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4.6%, 2030년에는 20.9%까지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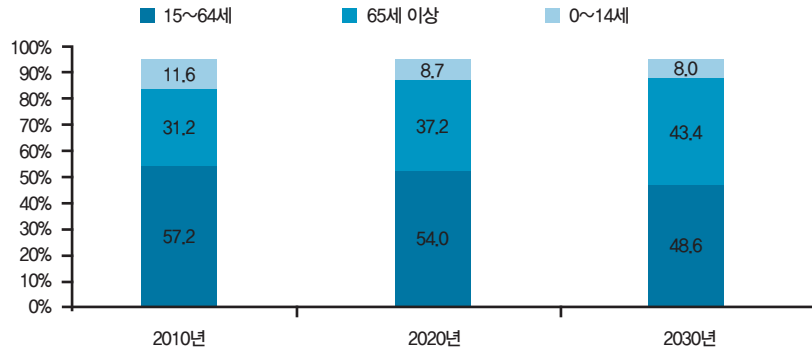
- 이 같은 지속적 인구감소에 따라 2020년에는 4개 시·군, 2030년에는 5개 시·군(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인구 2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 현재 5.8%인 1,000명 미만의 읍·면 수도 2020년에는 16%, 2030년에는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2,000명 이하 읍·면이 전체의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도 급격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농촌인구가 2010년 현재 31.2%에서 2030년에는 4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1) 전북인구는 통계청자료(장래인구추계 1970·2040) 활용, 전북 농촌인구는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하여 직접 추계

〈그림 3〉 농촌인구 연령별 분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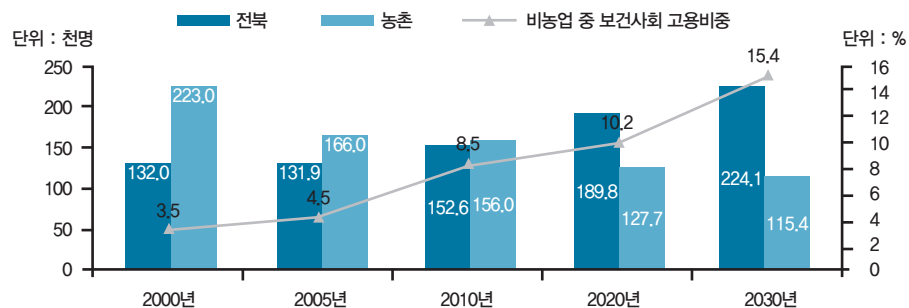


- 이처럼 과소화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귀농·귀촌 정책은 매우 유효한 수단
-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감소·고령화 → 공공서비스와 상업적 생활서비스 축소 → 경제활동 위축 → 인구감소·고령화' 라는 악순환을 끊는 데 매우 중요

## 2)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고용 전망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농촌 내에서 농업 고용이 비농업 고용보다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비농업 고용이 농업고용보다 2.5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고용창출 분야로, 2010년에는 비업부문 일자리의 8.5%였으나, 2020년에는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용 전망



참고 : 비농업의 경우 전라북도 농촌지역(읍, 면)의 고용자 수이며, 농업은 전라북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자료 : (비농업)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각년도 자료, (농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산업별 취업자)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촌지역 고용 증가의 많은 부분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이 분야에 재능을 가진 많은 도시민의 유치가 필요

  - EU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sup>2)</sup>
  - 캐나다 사례(Saskatchewan 지역)를 보면, 공공적인 사회서비스부문이 고용의 약 23% 차지하며, 고용기회의 46%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는 고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이면서 중간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외에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옴<sup>3)</sup>
- 공공사회서비스 부문과 함께 귀농인은 지역내외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보, 지역 내 파트너십 활동, 중소기업체 창업을 통해 농촌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 수행

  - 북아일랜드 농촌지역의 초소규모사업체(microbusiness)의 절반은 농촌이주자에 의한 창업으로, 이들 초소규모 사업체는 평균 2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sup>4)</sup>
  - 북동부 영국지역은 농촌지역 전체 고용의 7%가 귀농인들의 초소규모사업체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이는 기존 농수산부문 일자리 창출 3.7%에 비해 2배 이상임<sup>5)</sup>
  - 유럽사례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가족단위 소규모사업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유럽 농업구조개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함. 이 기간 동안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은 도시지역의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창출과 성장을 함<sup>6)</sup>
  - 영국 북동부지역사례 연구에 의하면, 소규모사업체를 보유한 농촌이주민의 40%는 새로운 사업 시작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비즈니스 창업자의 66%는 이주민에 의해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sup>7)</sup>
- 이처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외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체 창업 등 다양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을 가져다 줌

  - 농촌의 문화, 복지 등 현재 농촌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에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자의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
  - 귀농·귀촌자들에게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체나 가족중심의 초소규모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

### 3) 영농후계인력의 확보

- 현재 전라북도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농가비중은 증가추세인 반면 25~64세의 농가비중은 감소추세임

2) Terluinida, J. (2001). Rural Regions in the EU. Exploring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289. Utrecht/Groningen.

3) Diane J. F. and Kim S. (2006). The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of the Public Sector to Rural Saskatchewan.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91-113.

4) Bowsorth, G. 2006. Counter-urbanisation and Job creation: Entrepreneurial In-Migration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5) Stockdale, E. and Findlay, A. 2004. Rural in-migration: A catalyst for economic regeneration. Global Change & Human Mobility-ICG-UK Glasgow.

6) Smallbone D., North D., Baldock R., Ekanem I. 2002. Encouraging and supporting rural enterprise. RRR-RS009/02, Small Business Service, Kingsgate House, 66-74 Victoria Street, London SW1E6SW

7) Raley, M. & Moxey, A. (2000). Rural Microbusinesses in the North East of England: Final Survey Results. Newcastle: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과 향후 농업을 이어 나갈 신규 인력을 확보해야 함
- 따라서 농촌지역을 지탱하는 전통산업이자 기반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 식량위기와 지구촌 자원전쟁의 심화 속에서 경쟁력있는 농업후계인력의 확보는 매우 시급한 문제

〈표 1〉 경영주 연령별 농가비중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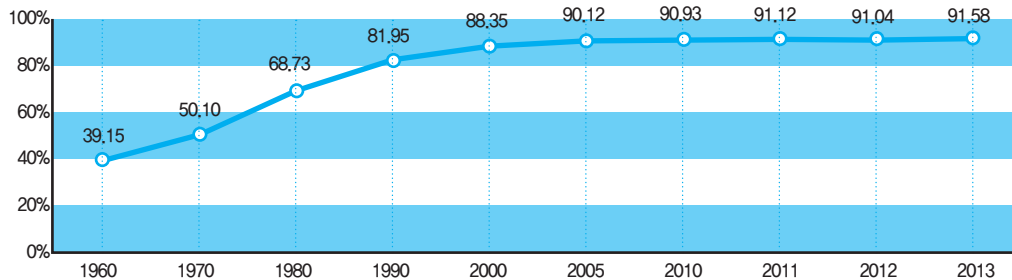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65세 이상	48,118	<b>55,039</b>	<b>52,792</b>
65세 이상	(35.02)	<b>(45.21)</b>	<b>(48.24)</b>
50~64세	<b>60,384</b>	47,175	41,390
50~64세	<b>(43.94)</b>	(38.75)	(37.82)
25~49세	28,839	19,510	15,234
25~49세	(20.99)	(16.02)	(13.92)
24세 이하	76	25	17
24세 이하	(0.06)	(0.02)	(0.02)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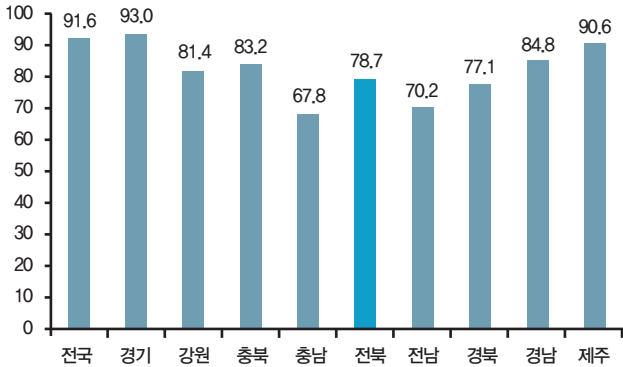
#### 4)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산업 집중과 농촌지역의 인구유출로 도·농간의 발전 격차는 계속 심화되어 옴
- 최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 총인구의 92%가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밀집하여 생활하면서, 도시의 경제·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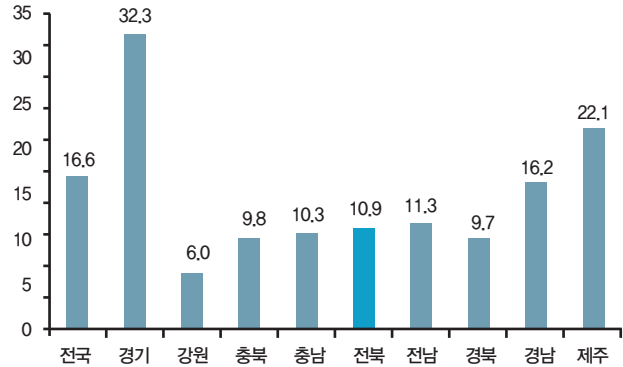
〈그림 5〉 도시지역 인구비율



〈그림 6〉 지역별 도시인구 비율(2013년)



〈그림 7〉 지역별 도시면적 비율(2013년)



자료 : 국토교통부(2014),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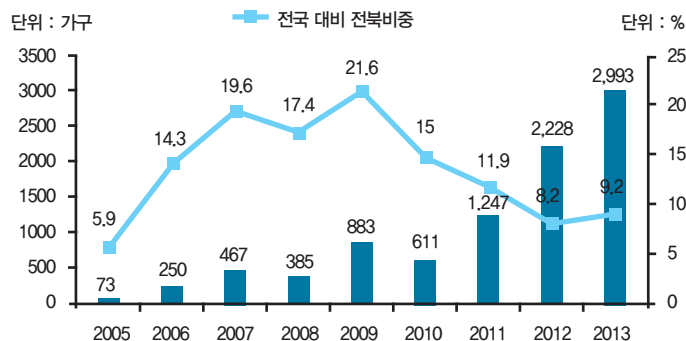
## 2.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 및 특성

### 1)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

#### ■ 전라북도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 전국의 2013년 귀농·귀촌가구 수는 2012년(27,008가구) 대비 1.2배 증가한 32,424가구(56,267명)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귀농·귀촌의 지속적인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가구 수는 2,993가구(5,469명)로 2012년(2,228가구) 대비 1.3배 증가함

〈그림 8〉 전라북도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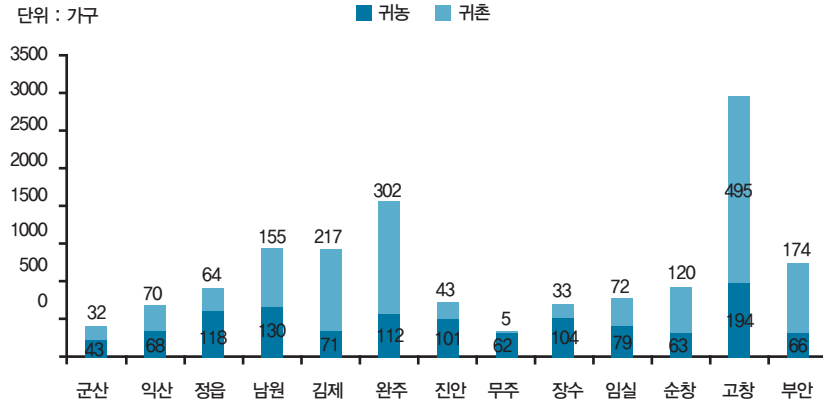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2014), 내부자료



### ■ 시군별 귀농·귀촌 현황

- 시군별로는 고창이 689가구(23.0%)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414가구, 13.8%), 김제(288가구, 9.5%), 남원(285가구, 9.5%), 부안(240가구, 8.0%), 순창(183가구, 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위 5개 시·군(고창, 완주, 김제, 남원, 부안)의 비중은 63.9%로 귀농·귀촌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9〉 시·군별 귀농·귀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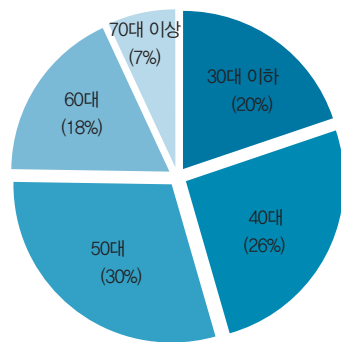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2014), 내부자료

### ■ 연령별, 영농별 귀농·귀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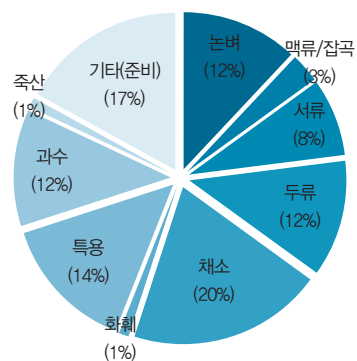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50대의 귀농·귀촌 가구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 30대 이하(20%), 60대 이상(25%) 순으로 나타남
  - 전국 : 30대 이하(15.6%), 40대(22.4%), 50대(32.1%), 60대 이상(29.9%)
- 귀농가구의 35%가 식량작물(논벼, 맥류/잡곡, 서류, 두류)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소·과수(32%), 특용·화훼(15%), 축산(1%)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연령별 귀농·귀촌가구 현황



자료 : 전라북도(2014),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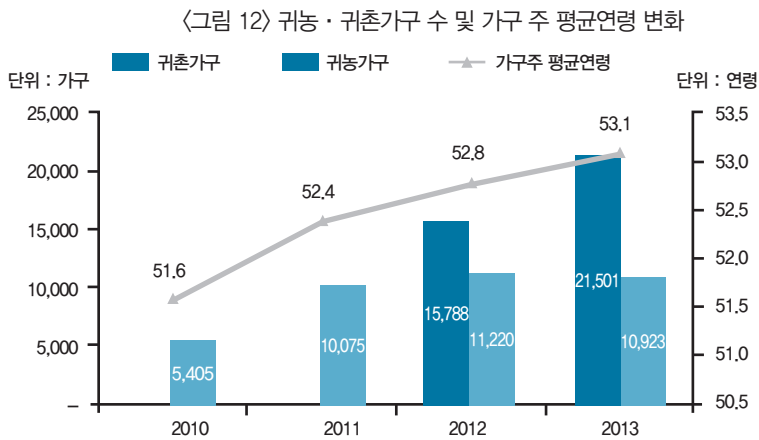
〈그림 11〉 귀농가구 재배작목 분포



## 2) 최근 귀농·귀촌의 특성

### ■ 귀촌가구의 급격한 증가

- 귀농·귀촌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2000년 초부터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1만세대 이상 급격하게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함
- 이 같은 귀농·귀촌 가구의 증대는 과거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귀농추세와는 달리, 은퇴·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 가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으로 추정됨
  - 2012년부터 집계가 이루어진 귀촌가구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귀촌가구가 15,788가구로 귀농가구의 1.4배였으나, 2013년에는 귀촌가구가 21,501가구로 귀농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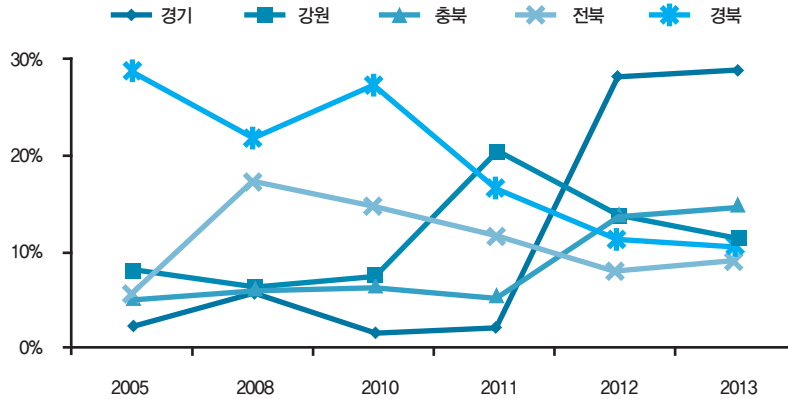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2014), 내부자료

### ■ 경기·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귀농·귀촌 증가

- 은퇴와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가구의 증가와 함께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 강원, 충북으로의 귀농·귀촌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귀농·귀촌 가구의 1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수도권 근교(경기, 강원, 충북)로의 귀농·귀촌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국 귀농·귀촌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로의 귀농·귀촌가구 비중은 2010년 전까지는 2~5%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 전국 귀농·귀촌 가구의 29%를 점유하고 있음(경기 29.1%, 충북 15.2%, 강원 11.5% 순)

〈그림 13〉 상위 5개 시·도의 귀농·귀촌 가구 비중



자료 : 전라북도(2014), 내부자료

### ■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귀촌 증가

- 귀농 가구의 연령분포 변화를 보면, 2000년 초까지는 30대 이하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귀농·귀촌가구의 가구 주 연령분포 변화

구분	1998	2000	2003	2005	2008	2012	2013
계	6,409	1,154	885	1,240	2,218	27,008	32,424
30대 이하	<b>62.9%</b>	<b>50.3%</b>	<b>34.2%</b>	27.5%	16.2%	17.3%	15.6%
40대	24.1%	33.9%	29.4%	<b>31.7%</b>	<b>31.5%</b>	22.5%	22.4%
50대	10.3%	13.4%	22.7%	25.7%	28.5%	<b>30.7%</b>	<b>32.1%</b>
60대 이상	2.7%	2.4%	13.7%	15.1%	23.8%	29.5%	2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3), 내부자료

- 이 같은 연령 변화와 기존 연구결과(김정섭, 2012)를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의 귀농 가구 수의 증가는 1990년 말 외 환위기 때와는 달리 경제적 요인 외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 첫째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등을 경험한 도시민들이 생태지향적인 일상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귀농 운동'이 점진적으로 확산
  - 둘째, 금융위기와 심화된 취업 기회 감소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들의 상당수가 귀농을 대안으로 선택
  -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
- 귀농 가구의 연령분포 변화를 보면, 2000년 초까지는 30대 이하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귀농자의 경우는 지가가 낮고 밭작물 재배가 용이한 지역 선호

-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은 경지면적(특히 밭 면적)의 크기와 귀농·귀촌인의 농지수요에 따른 수요공급의 조절장치인 지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최근 귀농이 가장 활발한 경상북도(상주, 영주, 봉화)와 전라북도 지역을 비교해보면(표 3), 귀농인들은 농지구입비 대비 소득율이 높은 과수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밭 면적이 많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경지면적과 귀농·귀촌 현황

구 분	경 북			전 북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12년귀농 귀촌현황	966명 (520농가)	611명 (279농가)	515명 (231농가)	1,465명 (787농가)	448명 (224농가)	393명 (194농가)	352명 (172농가)
경지면적(ha)	26,769	14,408	12,246	24,980	23,185	9,930	7,571
- 논	15,272	5,839	3,534	14,128	16,029	6,706	3,168
- 밭	11,497	8,569	8,711	10,852	7,156	3,224	4,403

자료: 귀농통계(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2년 경지면적(통계청, 농지면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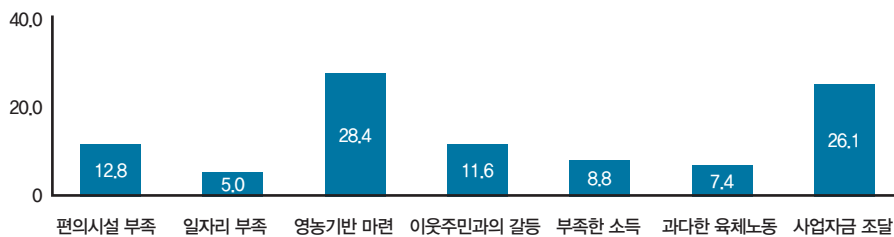
- 도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고창으로 귀농·귀촌인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귀농인 농지 구입의 증가로 2012년부터 고창의 지가가 전국평균과 도내(정읍, 남원 등)의 지가상승률을 추월하면서 귀농인의 농지구입 기간이 길어지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3. 귀농·귀촌 장애요인

### 1) 소득화 미비 :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귀농을 하지만 안정적인 영농소득 기반 미비

- 현재 귀농에 가장 적극적인 연령층은 40~50대 베이비부머
  - 1년내 귀농의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50대(19.4%) > 40대(18.1%) > 60대(15.4%)
- 귀농·귀촌 애로사항 : 영농기반 마련(28.4%) > 사업자금 조달(26.1%)

〈그림 14〉 귀농·귀촌 정착 시 애로사항



- 귀농인 51% 정도가 2억원 이하 자금으로 귀농함에 따라 주택확보 후 잔여자금 부족으로 영농기반 확보 어려움
  - 귀농 예상 자금(2011년 농업인재개발원) : 1억원 미만 20%, 1~2억원 미만 31%, 2~5억원 미만 39%, 5억원 이상 10%
- 영농 창업자금 융자 조건 충족할 수 있는 귀농자가 소수에 불과
  - 설정담보물 부담, 농신보 보증한도,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이 좋지 않아 실제 창업자금 수혜자는 5.8%에 불과(전북도, 2011)
- 시설원예, 과채류, 지역 특화품목 등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해서는 이론과 장기 현장실습교육(현장 멘토링, 2~10개월)이 필수적
  - 도 및 시·군 현장교육은 단기적(1~5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고소득 장기 실습교육 확대 필요

## 2) 주거문제 : 귀농자의 정착 정착률을 위한 단계적 거주방안이 미흡하며, 초기 정착을 위한 임대수요에 비해 임시거주 공간 부족

- 현재 예비 귀농자가 지역 정착 전 1~2년간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
  - 예비 귀농자는 지역현황 파악, 영농실습, 주거공간 확보 등 귀농 이전에 1~2년간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농촌 빈집 등 임시거주 공간이 부족
  - 현재 귀농인의 집은 6개월~1년 정도의 장기임대 수요가 많아 예비 귀농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귀농인 유치를 확대하고, 귀농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민 정착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1단계 : 기 조성된 체험·관광 마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 2단계 : 5도 2촌 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 농촌유학 등의 사업 전개
  - 3단계 : 정착 전 1~2년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 확보
  - 4단계 : 영구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 및 주택 신축 지원



## 3) 유치경쟁 심화 : 전라북도는 2000년대 귀농일번지로 귀농 선도지역을 유지, 최근 시·도간 도시민 유치 경쟁 심화로 차별화된 정책 필요

- 전라북도는 2000년대 귀농일번지로 귀농 선도지역을 유지
  - 그러나, 최근 타 시·도의 공격적 도시민유치 정책으로 귀농 일번지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음

- 전라북도는 2000년 중후반 도시민유치사업을 타 시·도에 비해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 귀농·귀촌센터를 진안, 남원, 고창 등에서 선도적으로 설치 운영
  - 도시민유치사업평가에서 전라북도 시군이 상위 5개 중 4개 차지
- 그러나 최근 경북(상주, 청도), 충북(진천) 등은 대도시 인접지역의 유리성과 전라북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도시민 유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경북, 충북, 경남 등은 상대적으로 인접 지역에 2~3개의 대도시가 있어, 최근 이들 지역에서의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도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비 귀농인에게 꼭 필요한 농지·주택구입, 임대정보, 빈집알선, 일자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예비 귀농자가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야 하나, 도와 시·군의 정보제공 시스템의 미흡, 상담사의 전문성 결여
  - 도와 시·군의 정보제공 수준이 도, 시·군 지원정책, 인터넷상담, 귀농인의 집, 성공사례 등 단순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음

#### 4) 여성일자리 부족 : 최근 가구단위 귀농·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이 핵심 정착요인이지만 여성정착 정책 부재

-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는 가구단위의 이주에서 귀농·귀촌 여성도 증가추세를 보임
  - 2012년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인원 2.2명으로 여성을 포함한 부부가구 이상의 정착가구가 점차 증가 추세
  - 귀농·귀촌여성의 증가는 여성인적자원의 농촌 유입으로 이어져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귀농·귀촌가구의 정착 실패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적응력 저하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농림수산식품부, 2011)
  - 귀농·귀촌 후 지역사회 정착에는 여성의 지역적응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경우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실패로 역귀농 발생
-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
  - 현재 전북지역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귀농·귀촌인 유치정책에 집중
  -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실패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적응력 저하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가구주와 함께 유입된 귀농·귀촌여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요한 요소
  - 귀농·귀촌정책이 가구 단위 중심의 유치와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정착의 주요 요소인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여성들이 귀농·귀촌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농촌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는 정책과제가 필요

## 5) 도농갈등 : 농지확보 갈등, 가치관 갈등 등 지역민과의 갈등문제 다수 발생

- 귀농자의 재탈농 핵심적 요인은 소득문제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
  - 재탈농 이유(농정원, 2012) : 소득 불안정 > 주민과의 갈등
  -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가의 경우도 귀농의 증가에 따른 농지 임대비용 증가, 정책자금 분산 등으로 귀농에 대한 지지가 점차 감소
- 귀촌자의 경우에도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동화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전원생활이나 생태를 추구하는 귀농자의 다수는 마을 상류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전혀 교류가 없고, 교통 문제, 식수오염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 귀농인은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의 역할
  - 귀농인은 지역내의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보, 지역 내 파트너십 활동, 중소기업체 창업을 통해 농촌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등
  - 영국사례 : 북동부 영국지역은 농촌지역 전체 고용의 7%를 귀촌인이 창출
  - 국내사례 : 마이크로비즈니스(장수 하늘소마을 친환경계란사업), 시장형 사회적기업(원주 목조공동체), 공공형 사회적기업(진안고원길), 사회적 일자리(진안 마을조사)
- 귀농인을 영농 외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귀농인과 농촌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귀농인들이 영농 외 활동, 즉 소규모 창업이나 지역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 6) 종합지원체계 미비 : 귀농 준비단계에서 정착 후 2~3년간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역귀농 현상이 발생

- 귀농자가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정보의 종합적 정보기능 미비
  - 현재 중앙정부와 각 시·군 귀농지원기관의 정보제공 수준은 도, 시·군 지원 정책, 인터넷 상담, 귀농인의 집, 성공사례 등 단순 안내 중심
  - 귀농인에게 핵심적인 농지·주택구입, 임대정보, 빈집알선, 일자리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 미비
- 초기 정착지 선택, 귀농자 수준에 따른 교육기관 추천, 귀농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상담 요구가 많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부족
  - 시·군별 특성, 귀농자의 귀농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지만 도 차원의 안정적인 귀농지원 기관이 없어 전문성 있는 상담사 확보 어려움
- 정착률 제고와 귀농 후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
-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미비

## 4. 전라북도 귀농·귀촌 발전비전 및 추진방향

### 1) 전라북도 귀농·귀촌 비전 및 전략



### 2) 추진방향

#### ■ Action 1 : 창업과 현장교육 강화로 안정적 영농소득 창출 지원

- 귀농자에 대한 영농 창업 용자 지원 강화
  - 창업자금 용자 조건 문제로 정부 창업자금 수혜자는 5.8% 불과
  - 귀농 초기 투잡지원 등으로 창업자금 수혜 조건 확보 지원
  - 고소득 작물 재배 귀농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용자
- 귀농대학운영으로 귀농자의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장기 실습교육 강화
  - 시설원예, 과채류, 지역 특화품목 등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이론과 장기 현장실습교육(현장 멘토링, 2~10개월) 지원 강화
  - 도 및 시·군 현장교육은 단기적(1~5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고소득 장기 실습교육 확대
- 영농멘토링지원을 통해 현장실습 기회와 선배 귀농인의 경험 전수
  -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선도농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례〉 완주군 귀농인 투잡(two-job)지원 사업

- ▶ 귀농인이 도시 근로자 연평균 가처분소득만큼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6.6ha의 벼 재배면적이 필요함. 그러나 2012년현재 전라북도 농가당 경지면적은 1.8ha에 불과하므로, 농업경영을 통한 소득확보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귀농인들이 영농외 활동, 즉 소규모 창업이나 지역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 귀농인들은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역할 담당이 가능함
- ▶ 완주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완주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6차산업화, 마을만들기 등 중소농육성과 귀농·귀촌을 연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투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완주군은 귀농·귀촌인이 귀농전 직업이나 특기를 살려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완주군 전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매년 5명 이내에서 지원하며, 투잡지원을 받는 귀농인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의 50% 정도인 월 60만원을 완주군에서 지원받음

## ■ Action 2 : 도시민 정착패턴을 고려한 단계적 주거·정착 지원

- 도시민 정착단계별 주거지원으로 귀농정착률 향상
  - 1단계 : 기 조성된 체험·관광 마을의 정비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 2단계 : 5도 2촌 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 농촌유학 등의 사업 전개
  - 3단계 : 정착 전 1~2년간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 확보
  - 4단계 : 영구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 및 주택 신축 지원
- 예비귀농자의 임시거주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정착 연락처 유도
  - 부족한 거주공간 극복을 위해 저점 임대주택 조성
  - 5도 2촌과 예비귀농인 영농교육을 위한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촌체험, 농업실습, 지역민 교류기회 제공
  - 중앙공모로 권역별 창업지원센터 조성 : 도 운영 1개소, 동부권 1개소, 서남해권 1개소

#### 〈사례〉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 ▶ 가족농원의 개념
  - 주말농장을 확장한 체재형 주말농장으로 도시민이 건강, 휴식공간, 자녀교육 기능을 위해 이용하는 집단공간으로 도시민에게 휴식을 겸한 5도 2촌 생활을 유도
  - 독일 '클라인가르텐', 일본 '시민농원', 영국 '얼랏먼트 가든', 러시아 '다차' 등 국가별로 여러 형태가 있음
- ▶ 진안군은 귀농 1번지 진안 이미지를 제고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조성
  - 입주자격 : 진안군 이주 1년 이내 귀농인으로 2인 가족이상 세대
  - 주택형태 : 원룸형 4동(13평), 투룸형 2동(20평), 복층형 2동(19평)
  - 임대료(년간) : 원룸형 250~400만원, 투룸형 400~600만원
  - 입주기간 : 1년(2년까지 연장 가능)
  - 시범포 : 20~180평(20평당 1만원)



■ Action 3 : 귀농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귀농인을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
  - 귀농인의 중소사업체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농촌일자리 창출
- 귀농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귀농인과 농촌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귀농인의 회사경험을 지역기업의 마케팅이나 판매에 적극 활용
- 여성귀농인과 새일센터를 연계한 새일센터 농촌형일자리 사업 추진
  - 농촌형 새일지원센터 전환으로 농어촌지역 내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보호, 방과후지도사, 행정정보조인력 등 연계

〈사례〉 진안군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지원사업

- ▶ 2007년 귀농·귀촌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응못하고 탈농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견
  - 귀농·귀촌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농촌에 없는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외소득 기반 창출 기회 제공
- ▶ 귀농·귀촌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초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및 행사 진행, 시제품 제작,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개인보다는 귀농인-지역주민 그룹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시너지 및 협력관계 제고
  - 5개 분야(농업, 교육, 문화, 복지, 기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우선 지원

〈사례〉 전라북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사례

- ▶ 문\*\*(장수군) : 서울에서 2003년 귀농하였으며 기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제 직거래망 구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창업을 통해 마을 내 일자리 창출
- ▶ 박\*\*(진안군) : 사진, 동영상 제작에 재능을 가진 문화인으로 자신의 재능에 도움이 될 곳을 찾아 2008년에 진안으로 귀농. 진안 전통시장 내에 문화체험 카페를 개설하여 문화가 살아야 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시장활성화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여 민속음식, 목공예 등에 재능있는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 ▶ 염\*\*(완주군) : 프로운동 선수 생활을 하다 2009년 귀농하였으며, 목조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내 목조가공사업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여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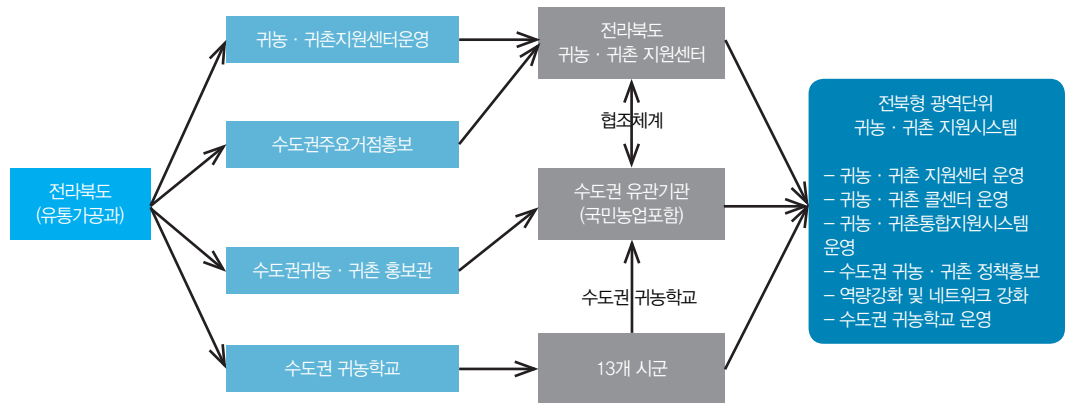
■ Action 4 : 귀농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홍보기능 강화
  - 귀농일번지 명성유지 위한 수도권 대상 찾아가는 홍보 강화
  - 귀농·귀촌 박람회, 전국귀농대회 유치를 통한 귀농일번지 이미지 강화
-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정보의 종합적 제공
  - 예비귀농인에게 소득, 연령별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지속적·체계적 귀농지원위해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 DB 구축으로 정착 후 맞춤형 관리통한 정착률 제고
  - 귀농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DB 구축
- 민·관·학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의견수렴과 방향설정을 위한 전라북도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

〈사례〉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 ▶ 광역단위 귀농·귀촌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일원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축
- ▶ 행정, 시·군 귀농·귀촌 협의회,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민간 귀농·귀촌 단체 등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와 연대 활성화를 통해 광역조직으로 서의 역할제고
- ▶ 전북도형 귀농·귀촌 통합 포털사이트 및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수요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중심으로 일원화된 사업 추진시스템 구축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